

관계부처 협의자료
(2004.5)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

2004. 5.

환 경 부

1. 제안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2003.12.31)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범위,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용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수원시, 성남시 등 24개시로 정함(안 제2조)

나. 저공해자동차를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제각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분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서를 매 3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7조)

마.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8조)

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9조 내지 제20조)

사.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경우를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으로 정함(안 제21조)

아.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 부과하는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4조)

자.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를 최근 3년간 년평균 판매수량이 3,000대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최근 3년간 년평균 판매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로 정함(안 제27조)

차.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으로 하고,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8조, 안 제29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열자동차, 수소자동차 등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거의 배출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경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중 현재 적용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동차(현재 적용되는 기준보다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중 현재 적용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동차(현재 적용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동차(현재 적용되는 기준보다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8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영향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친
환경적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①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추
진실적 보고서는 매 3년마다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골자
3. 시·도별 지역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계획을 말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5.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제7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 산업자원부장관 · 환경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 · 기
획예산처장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사가 된다.

제9조(사무국) ①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환경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 해당기관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3. 그밖에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제2항 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의 직을 겸
직한다.

④사무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직원중에서 환경부장관
이 임명한다.

제10조(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
2. 대기환경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각 1인 이상과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 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년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관계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1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9조(측정기기의 부착·가동 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관리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배출가스 유량 등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관리사업자가 부착하는 측정기기에는 적산전력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적산전력을 알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갖춘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측정결과의 기록 및 보존)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 및 산정한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배출부과금 및 황 함유 기준의 적용배제)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경우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경우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의 황 함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산화물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22조(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의 다음 년도 사용) ①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추가하여 할당한다.

1. 총량관리사업자별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의 총 합계가 다음연도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총 합계의 5%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의 $1/2$
2. 총량관리사업자별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의 총 합계가 다음연도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총 합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의 1

$/2 \times 0.05 \times$ (다음연도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총계/총량
관리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의 총계)

②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
총량을 다음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계수는 별표 3과 같다.

제24조(부과금 산정방법)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
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
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
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5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금

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즉시 납부통지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26조(징수비용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이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익년도 1월말까지 당해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7조(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년평균 판매수량이 3,000대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의 최근 3년간 년평균 판매수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은 10대를 말한다.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및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법인
5.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제외)

제30조(대기관리권역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연간 180일을 말한다.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결과 측정한 배출가스 차이의 정도를 기준

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매 1년마다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기준 및 등급산정을 위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 등급)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 품질등급은 당해 연료의 검사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급 기준과의 차이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당해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도

2. 당해 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 및 환경상 위해도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검사를 위해 자동차용 연료를 제조·공급·판매하는 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품질등급은 반기마다 고시한다.

⑤자동차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유발물질의 환경상 위해도, 시료의 채취방법, 분석방법 등 연료품질등급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제33조(시행계획 미수립시의 제재)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당해 시·도에 대한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을 말한다.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지역을 특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시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의 수리
2.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실시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조사
3.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4.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결과와 접수
5.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6.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7.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8.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9.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확인
10.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의 확인
11.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채취

제35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①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점검·확인하거나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의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측정결과 등의 보고 등 법령위반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서울특별시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서울특별시시장등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에

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①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37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별표

[4]

(24)

	1															
		2%	2% 4%	4% 8%	8% 10%	10% 20%	20% 30%	30% 40%	40%	1	2	3	4			
	4,260	1.2	1.56	1.92	2.28	3.0	4.2	4.8	5.4	1.2	1.4	1.6	1.8	2	1	1.5
	7,976	1.2	1.56	1.92	2.28	3.0	4.2	4.8	5.4	1.2	1.4	1.6	1.8	2	1	1.5
	13,193	1.2	1.56	1.92	2.28	3.0	4.2	4.8	5.4	1.2	1.4	1.6	1.8	2	1	1.5

: 1. (%) = (-) / × 100

2. :

3. : 36 . , 37

3. : , 42
36 , 37
(.), 40
, 42 가 ,

3. : 36 . .
, 37 31 .